

靑 “권력기관 그동안 국민 반대편 섰다”

“권력기관 서로 견제하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청와대는 14일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 조직의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섰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영화 ‘1987’을 보면서 시대 참상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인 이날 검찰·경찰·국정원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시내 한 영화관에서 조국 수석 등 참모진과 박종철 열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조 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불고문을 받다 죽임을 당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돼 남영동 대공본실에 끌려가 수배 중인 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다”면서 “당시 검찰, 경찰, 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영화 1987에 나온 것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에는 경찰의 불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 국민이 쫓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된 원인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었음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쫓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려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방안 배경을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반대파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야합당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문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려 한다”고 권력기관 개혁방안 배경을 말했다. /뉴시스

오늘 北 통일각서 ‘예술단 실무접촉’

판문점 채널 업무 개시...예술단 파견 협의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예술단 파견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남북이 연락채널 업무를 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우리측과 북측이 업무 개시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남북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계기 예술단 파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의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준 장관 명의로 우리측 대표단이 1월 15일 북측 통일각으로 나갈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전날 오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부터 먼저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실무접촉 대표단 단장으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 실무협의를 담당할 대표로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현충원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 단장을 내보낸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북측이 제시한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 대표단의 자격에 맞춰 우리 측 대표단을 구성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는다.

또 이원철 코리아인스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지용 코리아인스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준 장관 명의로 우리측 대표단이 1월 15일 북측 통일각으로 나갈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남북은 차관급 실무회담에 관한 의견까지 교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후 북측에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대3 실무회담을 판문점 남측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은이에 대한 답 대신 이날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을 판문점 북측에서 개최하자고 역제 의했다. /뉴시스



통합반대파 ‘보수야합당 반대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반대파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 등 지역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야합당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유영하 ‘특활비 뇌물’ 조력자 복귀

“돈 줬다” 진술, 응처는 개인적...상황 불리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특활비 뇌물’을 통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조력자로 복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그의 변론 전략도 관심거리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자 당일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재판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박 전 대통령의 ‘호위부사’로 재등장한 것이다.

상황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단 이미 시작된 관련 인물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모두 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만(52) 전 청와대 비서관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지원하는 자금을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돈이 국정원 특활비인지도 몰랐을뿐만 아니라 돈이 어떤 경위로 지원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받은 안봉근(52)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게 특활비였다거나 국정원장이 주는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할 뿐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사실은 인정할 것이다.

남재준(73), 이병기(70) 전 국정원장도 같은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사실관계 싸움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뉴시스

통합반대파 천정배 “기득권 야합 세력 기도 절대 용납 안 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박종철 열사 추모 31주년을 맞아 “87년 국민항쟁의 쓰디쓴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혁명의 큰 물줄기를 맞게 하려는 기득권 야합 세력의 기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미완으로 끝난 87년의 혁명을 완수해야 할 시대사적 사명이 있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소수 특권세력이 부와 권력을 독식해 온 탐욕의 시대를 떨쳐내고 상상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비자금 의혹 열쇠 쥔 ‘키맨’은

결재·차명 관리까지...비자금 핵심 3인방 주목

현대건설 재무통 출신 김성우 전 사장 ‘실세’ 역할 경리담당 ‘80억 횡령’ 특검 수사 불구 계속 근무 세상공업 경리담당 이씨, 차명계좌 43개 직접 관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비자금 조성 의혹이 1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소위 ‘MB맨’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중인 부외 자금(비자금)은 2003~2007년 기간에 조성된 120억 4300만 원이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이 추가로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 규모가 ‘120억 + α’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횡령부터 결재·차명 관리까지...비자금 핵심 3인방

현재 ‘MB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과 함께 다스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 조모씨, 다스 자회사격인 협력업체 세상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던 이모씨가 거론된다. 표면상으로는 이 3인방이 비자금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이나 다름없다.

김 전 사장은 현대건설 재무통 출신으로 1996년부터 이상은 회장과 다스 공동대표였다. 그는 다스 인감도장을 관리하며 자금 집행을 통제하고 이 회장을 견제한 실세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2월 특검 수사 발표 및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 있는 뒤 같은 해 4월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김 전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대통령 측의 경질성 해임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 후 재임기간 중 다스를 둘러싼 잡음을 의식해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다스 내부에 무성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조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자재 수입을 허위 계산하는 수법으로 약 80억 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총 17명 명의 43개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

조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스에서 퇴사하지 않고 품질보증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근무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바지 사장’, ‘MB의 숨은 사금고’ 등도 주목

이모 금강 대표는 ‘MB의 숨은 사금고’로 불릴 만큼 최측근 중 한 명

이다. 그는 1983년부터 20여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의 제남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고(故) 김재정씨가 운영하던 세진개발에서 일했다. 다스 자회사인 흥은프레임의 이사를 맡았으며 예전에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해 ‘MB 재산관리인’으로도 전해진다.

다스 비자금을 차명 관리했던 하청업체 직원 이씨는 비자금 120억 원을 다스 법인 계좌로 입금할 때 이 대표가 직접 동행해 상황을 감독했다고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도 비자금이 조성됐던 기간은 물론 현재도 다스를 이끌고 있는 최고 경영진이다.

다스 옛 직원들은 이 전 대통령을 ‘왕회장’, 이 회장을 ‘바지 사장’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이 회장은 다스 주식 13만 9600주(지분율 47.2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권모 전 다스 전무는 경리여직원 조씨와 김 전 사장의 중간에서 비자금과 관련된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비자금 120억의 조성 경위·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김 전 사장과 함께 같은 날 다스에서 퇴사했다.

/뉴시스

정호영 전 특검 “검찰, 다스 수사 직무유기했다”

“검찰 강제수사 계좌추적도 안해”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특검은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해보니 검찰은 2회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아

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다”며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 수사나 다스 법인 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특검은 “당시 특검은 검찰이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억 원 횡령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 “검찰은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 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뒷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특검이 4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돌려준 사건”이라며 “원래 사건 담당 검사는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일간해 수사할 것인지, 피회복이 됐는지까 일간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